

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주요 정책내용 및 평가

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「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·부흥」, 「세계적 경제위기예의 대응」, 「신시대에 부응한 외교·안전보장」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소신표명연설에서 최우선과제로 지진재해의 복구와 일본경제의 재건,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신성장전략을 강화하여 금년 중으로 일본재생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힘

□ 부흥·경제를 최우선, 금년 중에 재생전략 마련

- 노다 요시히코 신임총리는 9월 1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소신표명연설을 함. 동일본 대지진재해로부터의 복구·부흥과 경제위기예의 대응을 최우선과제로 내걸고 2011년도 제 3차 추경예산안 조기편성을 추진.
-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을 지향하고 신성장전략을 강화하는 일본재생전략을 금년중에 마련.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(TPP)교섭참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낼 것임을 표명.

□ 정책분야별 골자

- 지진재해로부터의 부흥·복구
 - 정부의 부흥기본방침에 기초하여 복구·부흥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국가적인 도전 차원에서 원발사고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임. 방사

선 물질에 오염된 토양 등의 제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체와의 협력도 중시하여 국가의 책임으로 전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, 원발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명백히 함.

- 부흥재원에 대해서는 차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방식이 아닌 어디까지나 현세대 전체로 연대하여 부담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임을 역설.
-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세목이나 기간, 년도별 규모 등에 대한 여러가지 선택지를 준비해 놓겠다는 방침임.

○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 개혁

- 2010년대 중반까지 소비세율을 10%로 인상하는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화된 개혁에 대하여 여야가 협의, 내년 1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을 거듭 시사
- 사회보장제도는 전세대 대응형으로 전환, 세대간 공평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함. 구체적으로는 민주당, 자민당, 공명당 3당이 합의한 아동수당 지급, 유·보일체화 제도 정비, 종합적인 아동양육 및 젊은 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, 의욕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「전원 참가형 사회」를 실현하는 동시에, 빈곤의 연쇄적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 구축 등에 역점

○ 엔高·산업공동화 대책

- 엔高와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경제대책으로서 기업입지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확충, 일본기업에 의한 해외기업의 매수지원, 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

○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의 양립

- 재정건전화 문제에 대해서는 세출삭감, 경제활성화와 풍요로운 국민생활을 통한 증세, 그리고 장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않는 방향으로 국민부담을 늘릴 수 있는 세입개혁에 주안점을 둠.
-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를 양립시키기 위해 신성장전략 추진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대지진 이후의 상황도 고려, 전략의 재강화를 통한 일본재생전략을 금년중에 마련
- 일본재생전략은 작년 6월 각의결정된 신성장전략을 확충하는 것으로 총리 주재의 새로운 회의체인 국가전략회의에서 구체화될 예정. 동 회의체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통괄하는 사령탑 역할을 할 것임.
-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활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환경·에너지 및 의료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과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정비, 해외 성장시장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경제 연대협정의 전략적 추진, 민·관 일체의 시장개척체제를 구축
- 농림어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이자 기간산업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

○ 에너지 정책

- 2030년까지의 에너지 기본계획을 백지상태에서 재출발, 내년 여름을 목표로 새로운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한편, 중장기적으로는 원발 의존도를 가능한 한 낮춰갈 방침을 표명. 다른 한편으로 일방적인 정기검사로 정지중인 원발에 대해서는 안전확인과 주민들의 이해를 전제로 재가동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힘.

○ 외교문제

- 신시대에 부응한 외교·안전보장을 추구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미국과 근린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나감.
- 미·일관계에 대해서는 미·일동맹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하여 오키나와현의 후텐마(普天間)미군기지를 나고(名護)시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미·일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힘.
- 한·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가일층의 관계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밝힘.

□ 평가와 전망

- 총리의 소신표명연설에 대한 일본 언론(요미우리 신문)의 평가는 총리의 현상인식에 이론(異論)은 없으며 문제는 「국가의 신용」을 회복하고, 일본을 재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취하느냐 하는데 있음을 지적
- 그런가 하면, 일본경제신문은 총리가 일본국회의 난맥상을 고려, 야당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자세를 강조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고 평가
- 총리는 소신표명연설에서 대지진,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위기라는 두개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당면한 최대과제임을 강조하고 있음.
- 이 과제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최대 난제가 바로 재원문제임. 이 재원문제를 놓고 여야간 정책협의를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전단계에서도 난항이 예상됨.

- 부흥증세나 TPP참가 문제를 놓고 민주당내에서도 신중론이 만만치 않음.
- 더욱이 노다 신정권은 최근 총리나 당 간사장, 정조회장 등으로 구성되는 정부·민주당 3역회의를 사실상 정책결정 기관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당측의 발언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흥증세나 TPP참가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

< 참고자료 >

日本經濟新聞(2011.9.13/14)외 각종 포털사이트